

민주 “위법 없어” … 한국당 “파면해야”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민주 지도부 정면 돌파 의지
보수2야, 전방위 사퇴공세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표명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요가 감지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상당히 접근한 것”이라면서 자택 압수수색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지는 반면 기각되면 검찰 수사와 아관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규모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조국 정국’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개혁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로 분석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

회’를 거론한 뒤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주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위기감 표명도 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에는 당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됐다든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저릴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

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을 여권에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조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치원 3법’ 오늘 표결

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본회의 자동 상정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처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의결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

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행사 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증제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민부론’은 ‘민폐론’”

한국당에 혹평… “재벌·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들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은 ‘민폐론’이라고 혹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 시장 유연화하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려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

했다. 심 대표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 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 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큰 정부’ 여사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이 문제”라며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델을 주장하는 한국당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한 입장 없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예의주시’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심경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순방을 떠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아직은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밝힌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 임명 이후 2주가 지났는데도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일어난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전세계를 향해 표명할 ‘한반도 평화’ 의제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희석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권역별 의원 릴레이 오찬

총선 전략 의견 청취… 26일 광주·전남·전북 의원들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로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국에서 지역별 민심을 취합해 총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론 확산에 따른 당내 동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이 대표는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 7명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지역 민심과 총선 전략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안산·군포 지역 의원들, 19일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지역 의원들과 각각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을 기점으로 당내에서 불거진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호남지역 의원들은 조국 정국을 보는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한편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의중을 물을 예정이다. 또 내년 호남 현안 예산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경원, 아들 이중국적·원정출산 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당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홍준표 전 대표가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당내 논란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에만 해도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원내대표의 의혹 해명을 촉구한 홍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당내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의원이 다수 포진한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나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있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내

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 우파의 적”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정출산이 아니냐고 하더니 이제는 이중국적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며 “둘 다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정출산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에 대해 “설립 연월일이 2000년인데, 저의 아이는 1997년 출생”이라며 “명백히 가짜자료란 것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J1 4point
- J2 5point
- J3 6point
- J5 8point
- J6 10point
- J12 12point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